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추이와 의미

김 정 우*

I. 머리말

최근 몇 년 사이 한국경제의 외형적 지표를 살펴보면 1970~80년대의 고도성장에는 미치지 못하나 적어도 IMF 외환위기의 충격은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지표와는 달리 최근 들어 분배구조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꾸준히 지적되어온 바와 같이 비정규직의 증가 및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우려하는 문제 제기가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¹⁾

소득불평등의 수준을 알아보는 방법은 노동소득분배율 외에도 로렌즈곡선(Lorenz curve),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5분위분배율 혹은 10분위분배율, 파레토계수(Pareto coefficient), 앳킨슨지수(Atkinson index)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타요소소득(주로 자본소득)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피용자(임금근로자) 등 근로계층의 소득분배 비중 변동을 살펴볼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본 후,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원인을 추론해 보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시도할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kjw@kli.re.kr).

1) 실제 1990년대 초반 0.281~0.287 수준이었던 지니계수는 1998년에 0.316을 기록한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4년의 지니계수는 0.310이다(통계청, 『도시가계연보』).

II. 노동소득분배율의 정의 및 논점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주로 국민소득을 노동소득으로 나눈 지표를 사용한다. 이때 국민소득 및 노동소득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의 실제 수치는 상당정도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함에 있어 오랜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선 분모가 되는 국민소득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내총생산(GDP)으로 산정하는 경우와 ‘국내총생산-(간접세+고정자본소모)’, 즉 요소국민소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간접세+고정자본소모’를 자본소득으로 파악하므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과소 추정된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간접세+고정자본소모’를 비용의 개념으로 파악하게 되므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과대 추정되는 차이가 있다.

또한 국민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을 구할 때에는 국민총생산(GNP)을 사용할 수도 있고 국내총생산(GDP)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한편 정부부문의 비대화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교란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부문만을 측정대상으로 할 때에는 해당 민간부문의 부가가치만을 사용하기도 한다.

분모가 되는 노동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wages), 비생산직 노동자의 봉급(salary), 기타 노동소득,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지급되거나 귀속되는 분담금, 개인연금 등 기타 제도에 따른 고용주 분담금, 그리고 자영업자 또는 비법인기업의 소득 중 귀속노동소득 부분 등이 포함된다.²⁾ 그런데 자영업자의 소득을 재산소득과 노동소득으로 구분하여 노동소득 부분만 따로 계산해 내는 것이 실제로 용이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전부를 영업잉여로 보고 피용자보수만을 노동소득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실제보다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체 취업자 중 피용자의 비중이 낮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더욱 문제가 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요소소득간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분배율을 살펴볼 때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지만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2) 소득분배와 계급의 관계에 관심 있는 논자들은 노동계급 소득을 엄격히 생산직 노동자의 보수, 즉 임금만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고 흔히 부가급여(fringe benefit) 등은 비임금성분으로 간주하여 제외하기도 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유량(flow)개념인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저장(stock)개념인 소득 이외의 부(富)의 분배를 반영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 등의 부(富)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 노동(피용자)내부의 격차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으로 전체적인 노동소득의 몫이 커졌다 할지라도 고용구조가 악화되어 근로자간 노동소득의 격차가 확대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득분배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을 피용자의 소득분배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로 일반화하기보다는 계층·연령·직종별 소득 및 고용구조 등 미시적인 분배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Ⅲ.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추이 및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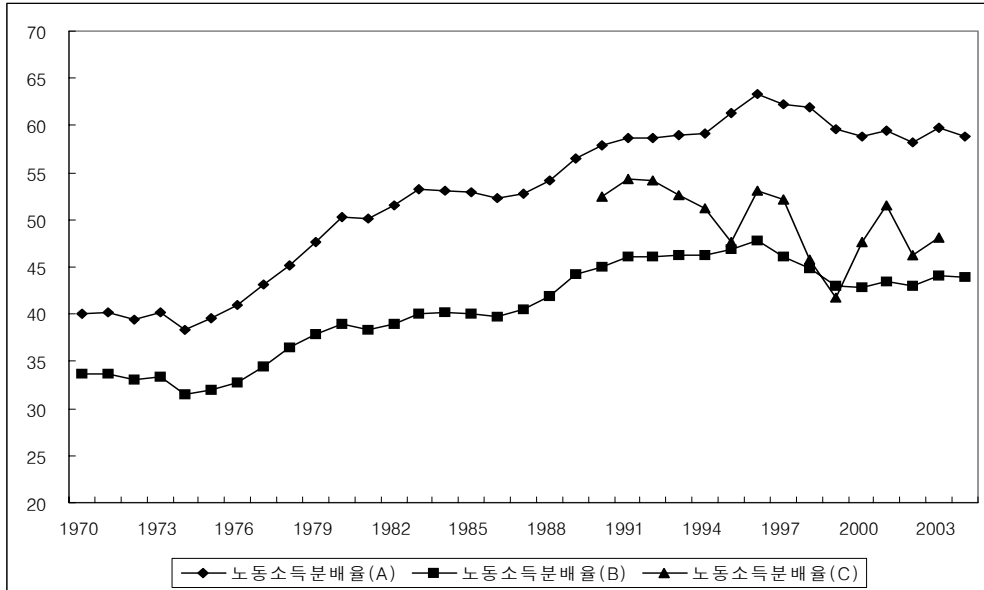
[그림 1]은 1970년대 이래 최근까지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대략 197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해 1996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노동소득분배율(A) 기준 63.4, 노동소득분배율(B) 기준 47.8). 이후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뚜렷한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구체적인 수치는 이 글 맨 뒤의 <부표 1> 참조).

노동소득분배율(A)은 전산업을 대상으로 요소비용국민소득을 피용자보수로 나눈 것이고, 노동소득분배율(B)는 전산업을 대상으로 국내총생산(GDP)을 피용자보수로 나눈 것이다. 어떤 기준을 사용하건 1970년대 중반 이후 줄곧 상승하던 노동소득분배율이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여 소강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C)는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인건비를 부가가치로 나눈 것인데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비교적 급속하게 향상된 원인은 우선 산업화의 진전에 의해 피용자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고 1987년 이후 노동조합 조직화의 진전으로 인한 임금상승 효과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A)와 노동소득분배율(B)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요소비용국민소득의 크기가 점점 더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즉 간접세와 고정자본소모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그림 1] 197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추이

(단위: %)



- 주: 1) 노동소득분배율(A)=(비용자보수/요소비용국민소득)×100(전산업).
- 2) 노동소득분배율(B)=(비용자보수/국내총생산)×100(전산업).
- 3) 노동소득분배율(C)=(인건비/부가가치)×100(제조업).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및 『기업경영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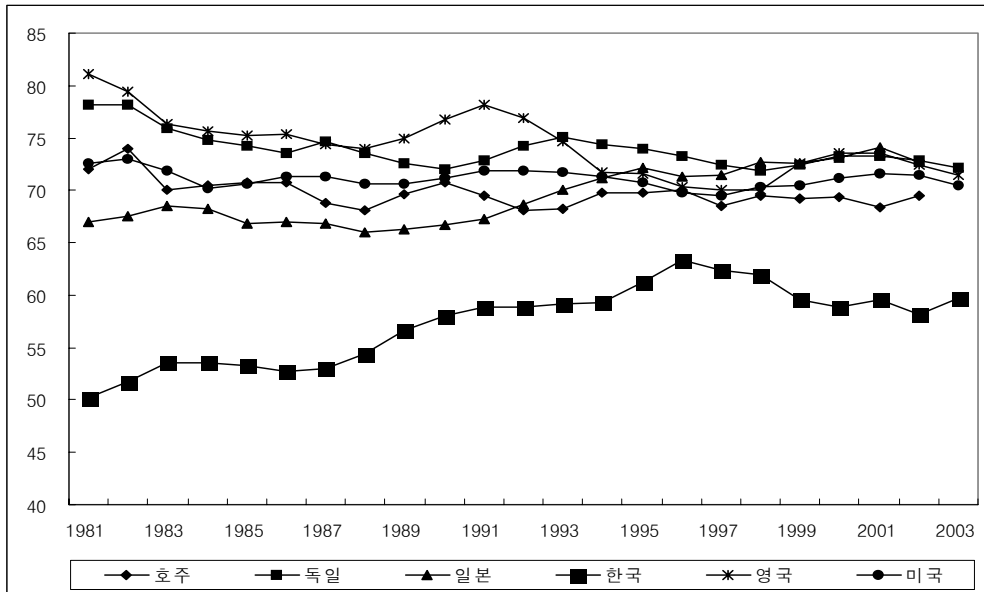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 [그림 2]는 1981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 속에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구체적인 수치는 이 글 맨 뒤의 <부표 1> 참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현격히 낮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낙후된 고용구조이다. 즉, 선진국에 비해 기업화 정도가 낮은 농림어업의 취업비중이 높은 데다 총취업자 중 임금을 받는 비용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비용자보수의 몫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전체 취업자 대비 비용자 비중은 1998년의 61.7%에서 2004년에 66.0%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4%를 정점으로 2004년 58.8%까지 하락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IMF 외환위기 이후의 시기에 대한

[그림 2] 1981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의 국제비교

(단위: %)



주: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요소비용국민소득)×100.
 자료: 한국은행, 『OECD 국가의 국민계정 주요지표』, 2005.

그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피용자 중 임금수준이 낮은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확대되고(1998년 46.9% → 2004년 48.8%)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간의 임금격차가 커지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IV.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요인

일반적으로 볼 때 노동소득분배율은 취업자 중 피용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그리고 자본에 대한 노동의 상대가격이 높을수록 그 값이 커진다. 이때 피용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고용구조의 고도화, 즉 자본주의화의 진전과 관련 있고, 노동집약도의 변동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연관될 것이며, 노동의 상대가격 상승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포함한 자본-노동간 세력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아래 <표 1>은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요인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1982년부터

2004년까지 노동소득분배율과 고용구조(피용자 비율)의 변동, 산업구조(노동집약도)의 변화, 자본-노동간 세력관계 척도(실질임금상승률과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격차)의 변화를 구간을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표 1〉 1982년 이후 기간별 노동소득분배율 및 관련 지표의 변화추이

		피용자 비율(%) ¹⁾	노동집약도(%) ²⁾	자본-노동간 세력관계 척도 ³⁾	노동소득분배율(%) ⁴⁾
연평균	1982	47.6	122.7	6.7	51.5
	1987	56.2	79.8	2.7	52.7
	1992	62.7	46.2	5.9	58.7
	1997	63.2	27.3	-0.1	62.3
	1998	61.7	25.4	-11.1	61.9
	1999	62.4	23.9	5.1	59.7
	2000	63.1	23.1	2.4	58.8
	2001	63.3	22.0	0.1	59.4
	2002	64.0	20.7	5.0	58.2
	2003	65.1	19.9	2.7	59.7
기간평균 증감률 ⁵⁾	I기(1982~1987)	18.1	-35.0	2.8	2.3
	II기(1988~1997)	10.9	-61.1	4.1	15.2
	III기(1998~2004)	7.0	-24.7	0.7(2.7)	-5.0
	1982~2004	38.7	-84.4	2.7(3.3)	14.2

주 : 1) 피용자 비율=임금근로자/취업자.

2) 노동집약도=임금근로자/국내총생산(10억원당).

3) 해당시기 실질임금상승률과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간의 격차를 의미하며, 실질노동생산성(지수)은 2000년을 기준(100.0)으로 실질부가가치산출량을 노동투입량(人)으로 나눈 개념임.

4)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요소비용국민소득)×100(전산업).

5) 해당기간의 증감률을 의미하며 ()안은 1998년의 사례를 제외한 값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각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한국노동연구원, 『KLI노동통계』, 각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전체 분석기간 동안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노동집약도(=임금근로자수/국내총생산)가 크게(84.4%)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대개 노동집약도가 낮아지는 것이 생산성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며 경제가 고도화되는 방향인데, 이는 같은 기간 실질노동생산성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과는 부합된다.³⁾ 그밖에 전체 취업자 중 피용자의 비중이 약 38.7% 증가했고, 자본-노동간 세력관계 척도는 전체적으로 생산성 증가율보다 2.7%포인트 높은 실

3) 2000년을 기준(100.0)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실질노동생산성지수는 1982년에 50.8에서 2004년 110.2로 116.9% 증가했다.

실임금상승률을 보였으나 그 크기는 1989년(+13.4%포인트)을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라는 1998년의 예외적 상황(실질임금 전년대비 9.3% 감소)을 제외하면, 최근의 자본-노동간 세력관계 척도(+2.7%포인트)는 1987년 이전(+2.8%포인트)과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I기(1982~1987년)와 II기(1988~1997년)를 비교해 보면, II기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5.2% 증가하여 I기의 증가율(2.3%)을 압도하고 있는데, II기에는 I기에 비해 노동집약도가 더 크게 감소했고(61.1% 감소), 피용자 비율의 증가율(10.9%)이 둔화되었다. 한편 자본-노동간 세력관계의 척도로 간주할 수 있는 실질임금상승률과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간의 격차는 II기의 경우 4.1%포인트로 I기의 2.8%포인트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는 II기 동안 이루어진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 당시 활성화된 노동조합운동으로 인한 노조교섭력 증대에 힘입은 자본-노동간 세력관계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을 제시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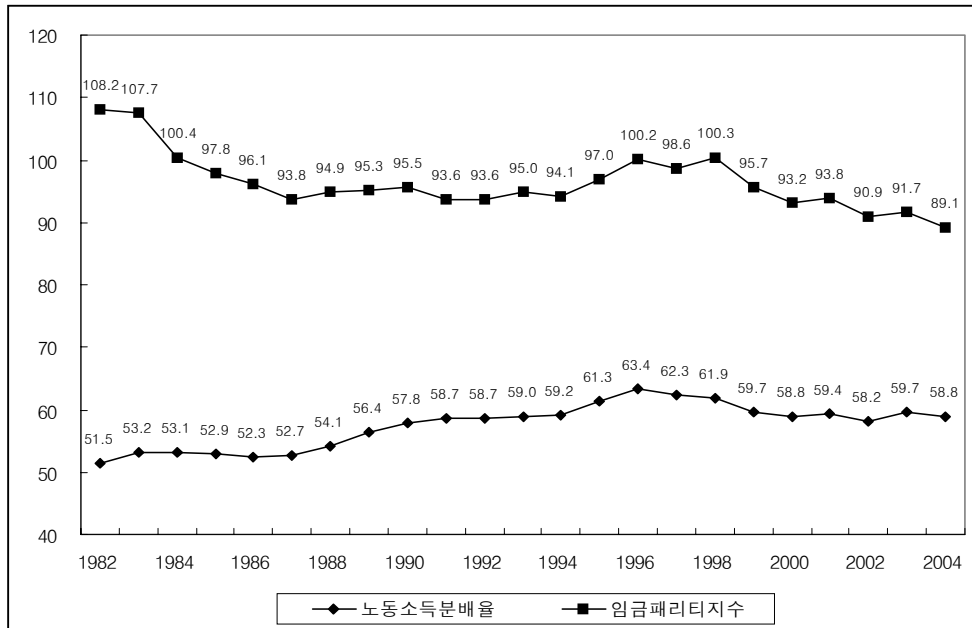
노동소득분배율은 III기(1998~2004년)에 들어 오히려 5.0%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피용자 비율은 7.0% 증가했는데 이러한 증가율의 크기는 전기(前期)들에 비해 둔화된 것이며,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노동집약도 역시 감소했지만 그 감소율의 크기는 이전 시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III기 동안 자본-노동간 세력관계 척도는 0.7%포인트 증가하여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세력관계 척도변화의 원인은 조직노동자들에 있어서는 1998년 당시의 경제적 충격이 양보교섭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고, 미조직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1998년을 제외하면 조직노동자들의 교섭력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으나 비정규직화의 진전에 따라 전체 자본-노동간 세력관계에서 노동의 우위정도는 II기(1988~1997년)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1998년의 상황을 제외하면 III기 동안 자본-노동간 세력관계 척도는 +2.7%포인트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이전인 I기(1982~1987년) 동안의 척도(+2.8%포인트)와 거의 같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III기 동안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 주요 원인은 이 기간 동안 고용구조 고도화의 부진과 함께 1998년 당시의 경제적 충격에 따른 양보교섭 및 이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에 기인하는 자본-노동간 세력관계의 변동이 동반되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들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의 변동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임금패리티(parity)지수를 활용해 보겠다. 임금패리티지수는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국내총생산)을 임금근로자 비중(임금근로자/취업자)으로 나누어서 구하는데, 이는 취업자 1인당 평균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소득의 상대적 비율을 의미한다.

[그림 3]은 1982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과 임금패리티지수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피용자보수와 관련하여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국내총생산)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피용자보수의 크기(분모)가 커져야 하는데, 이는 피용자의 절대적 규모가 증가하거나 피용자 1인당 보수의 크기가 증가될 때 달성된다. I기(1982~1987년) 동안 노동소득분배율은 다소 향상되었지만 임금패리티지수는 108.2에서 93.8로 오히려 하락했는데, 이 사실로부터 이 시기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주로 피용자의 절대적 규모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3] 1982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과 임금패리티지수의 변동

(단위 : %)



주 :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요소비용국민소득)×100.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II기(1988~1997년)에는 노동소득분배율도 크게(15.2%) 상승하고 임금패리티지수도 94.9에서 98.6으로 향상되었다(1997년이 실질적으로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시점임을 감안하면, 1996년의 임금패리티지수는 100.2를 기록함). 그러나 IMF 외환위기 직후인 III기(1998~2004년)에 들어서는 노동소득분배율도 5.0% 감소하고 임금패리티지수도 100.3에서 89.1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과 임금패리티지수의 동반상승 및 동반하락은 자본-노동간 세력관계의 척도 변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자본-노동간 세력관계의 척도(실질임금상승률과 실질노동생산성 상승률의 격차)가 +4.1%포인트로 비교적 높았던 II기(1988~1997년)에는 노동소득분배율과 임금패리티지수가 동반상승한 반면, 자본-노동간 세력관계의 척도가 +0.7%포인트로 비교적 낮았던 III기(1998~2004년)에는 노동소득분배율과 임금패리티지수가 동반하락한 사실에서 그렇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이후부터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약 10년 동안 노동소득분배율이 비교적 급격히 개선되어 왔다. 그 원인으로는 고용구조의 고도화(피용자 비율의 급격한 증가), 자본-노동간 세력관계에서 노동의 우위(노동생산성증가율을 다소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실질임금상승률), 산업구조의 고도화(노동집약도의 하락을 상쇄할 만한 노동생산성의 증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피고용자 비율의 증가가 둔화되고, 특히 실질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증가율간의 격차가 줄어들어 등 자본-노동간 세력관계가 변화했으며, 임금패리티지수의 변동에서 나타났듯이 임금근로자 계층의 경제적 지위가 하락해 왔는데, 이것이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 평가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이 시기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전체 취업자 중 피용자의 비중이 낮아서 생기는 소위 ‘낙후된 고용구조’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비록 1970년대에 비해서 격차가 많이 축소되기는 했으나 최근까지 여전히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득불평등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임금패리티지수를 통해 살펴본 국민경제 전체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 역시 IMF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피용자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나 일단 그 이전시기에 비해 자본에 대한 노동의 세력관계 우위 정도가 크게 축소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고용의 질이 하락하고, 피용자 내부의 노동소득간의 격차가 심화된 것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심화되는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소득재분배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피용자 집단 내의 한계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들의 임금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노동공급의 축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상향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임금근로자 집단 내의 저소득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것도 이들 저소득 피용자계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 역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는데, 조합원(조직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뿐 아니라 비조합원(미조직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직노동자 이외의 중소기업 및 저임금노동자와의 임금격차 축소를 지향하는 연대임금 정책을 본격적인 의제로 상정해야 하며, 임금인상의 효과가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신규조직화, 산업별 교섭의 촉진, 단체협약 포괄범위의 확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유선,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004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04.
- 배진한,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논문, 1991.
- 정진호·신동균·강승복, 『노동경제용어 길라잡이』, 한국노동연구원, 2004. 7.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각호.
-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2005.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 _____,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 _____, 『OECD국가의 국민계정 주요지표』, 2005.
- _____,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2003. 4.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2004.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1983-2003*, 2004.

〈부표 1〉 197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추이

(단위: %)

	호 주	독 일	일 본	영 국	미 국	한 국		
						A	B	C
1970	-	-	-	-	-	40.0	33.7	-
1971	70.2	70.9	57.6	74.0	72.3	40.2	33.6	-
1972	-	-	-	-	-	39.4	33.1	-
1973	-	-	-	-	-	40.1	33.4	-
1974	-	-	-	-	-	38.3	31.6	-
1975	75.0	75.2	66.4	81.1	72.2	39.5	31.9	-
1976	-	-	-	-	-	40.9	32.8	-
1977	-	-	-	-	-	43.1	34.4	-
1978	-	-	-	-	-	45.2	36.4	-
1979	-	-	-	-	-	47.7	37.9	-
1980	70.4	77.3	65.9	81.4	73.5	50.3	39.0	-
1981	72.0	78.2	67.0	81.1	72.5	50.1	38.3	-
1982	74.0	78.2	67.6	79.4	73.0	51.5	38.9	-
1983	70.0	75.9	68.5	76.3	71.9	53.2	40.1	-
1984	70.5	74.8	68.2	75.6	70.2	53.1	40.1	-
1985	70.8	74.3	66.9	75.2	70.6	52.9	40.0	-
1986	70.8	73.6	67.0	75.4	71.3	52.3	39.8	-
1987	68.8	74.6	66.8	74.4	71.3	52.7	40.5	-
1988	68.1	73.5	66.0	73.9	70.6	54.1	41.9	-
1989	69.6	72.5	66.3	74.9	70.6	56.4	44.2	-
1990	70.8	72.0	66.7	76.7	71.2	57.8	44.9	52.4
1991	69.5	72.9	67.3	78.2	71.8	58.7	46.1	54.3
1992	68.1	74.3	68.7	76.9	71.9	58.7	46.1	54.1
1993	68.2	75.1	70.0	74.6	71.7	59.0	46.2	52.6
1994	69.7	74.4	71.2	71.7	71.3	59.2	46.2	51.2
1995	69.7	74.0	72.1	71.6	70.8	61.3	46.9	47.7
1996	70.0	73.3	71.3	70.3	69.8	63.4	47.8	53.0
1997	68.5	72.4	71.5	70.0	69.5	62.3	46.1	52.1
1998	69.5	71.9	72.7	70.1	70.3	61.9	44.8	45.7
1999	69.2	72.4	72.6	72.6	70.5	59.7	43.0	41.7
2000	69.3	73.2	73.1	73.5	71.2	58.8	42.9	47.7
2001	68.4	73.2	74.1	73.5	71.6	59.4	43.5	51.5
2002	69.5	72.9	72.7	72.4	71.4	58.2	43.0	46.3
2003	-	72.2	-	71.5	70.5	59.7	44.1	48.1
2004	-	-	-	-	-	58.8	44.0	-

주 : 1) A=(피용자보수/요소비용국민소득)×100(전산업).

2) B=(피용자보수/국내총생산)×100(전산업).

3) C=(인건비/부가가치)×100(제조업).

4) 외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A방식으로 계산된 값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및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OECD 국가의 국민계정 주요지표』, 2005.